

의안
번호

689

【울산광역시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5. 6(수) 장정옥의원 외 3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5. 11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5. 15(금)

2. 제안이유

- 「교육기본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,
-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성인 문해교육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, 성별, 직업을 불문함.
(안 제3조)
- 나.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,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함.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.(안 제5조)
 - 1) 비문해자 조사 실시
 - 2)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
3)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지원

4)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
보급지원

5)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행사 개
최

라.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교육청
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6조)

마.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
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라.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요청시 지장이 없는한 허용함.
(안 제8조)

바.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각종 연수 활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가. 「교육기본법」

나.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
《교육기본법》

제3조 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 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《평생교육법》

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7조 (공공시설의 이용)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
《평생교육법》

제11조 (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6조 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9조 (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시행령]

제72조 (문자해득교육의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
2. 문자해득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
3. 문자해득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

② 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5. 검토사항 : 상위법령과의 타당성 여부

6. 참고 사항

○ 용어

- 비문해(illiteracy) : ‘글을 읽고 이해함’을 뜻하는 ‘문해’의 반대

개념. 과거에는 ‘문맹’이라고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하여 최근에는 ‘비문해’라고 함.

- 문해력 :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말함

○ 성인 문해교육 실시기관 현황

기관명	대표	소재지	등록인원	비고
계			140	
시민학교	김동영	반구동	80	교육청 지정 평생교육시설
함께하는 사람들	손경숙	태화동	60	

7. 검토의견

-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이 2008년도에 전국의 19~79세 성인 12,137명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전체의 1.7%인 약 62만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- 이 가운데 울산시의 경우 0.3%인 2,400 여명이 비문해자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. 이는 사회 편견 등을 감안 할 때 비문해자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- 비문해율은 이전의 ‘문맹률’을 대체하는 단어로 신문기사, 안내문, 광고 등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냅니다.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자녀들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, 기본적인 삶의 인권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의 기회 제공과 경비를 지원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으로

-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과 정의, 대상,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,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중구청장의 임무와,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와 공공 시설의 이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-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지만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자 수가 적고,
- 사회적 편견 등으로 소홀해 질 수 있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, 특화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영역을 강화하고자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
- 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.